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러시아 경제의 동방 지향성과 탈탄소화 동인

이창혁

석사과정, 러시아·CIS 경제 전공
thepaul429@gmail.com

러시아 타스통신은 2023년 1월 25일 자 보도에서 막심 레세트니코프 경제개발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다. “저탄소 경제를 향한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유럽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 과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가 아시아와 교류 비중을 늘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중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 의제다.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의 동방 지향성과 기후 위기 사이에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이것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한다.

EU의 CBAM 도입 배경과 현황

2021년 7월 유럽위원회(EC)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CBAM 도입을 세계 최초로 선

언했다. EC는 2022년 12월 최종 합의된 법안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 적용을 시작한다. EU 내 수입업체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돼 결정된다. EU는 2025년까지 약 2년 3개월을 전환 기간(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만 보고받고, 이 기간에 플라스틱·유기화학품을 적용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EU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관세 형태로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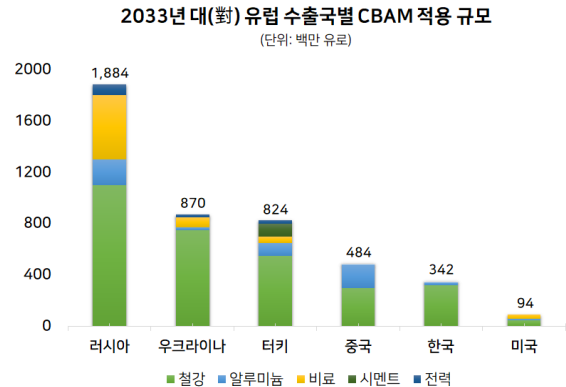
출처: Oxford Analytica Daily Brief

현재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EU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별도 비용을 지출해 온 EU 역내 기업들과는 달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역외 국가들은 동일 수준의 탄소 배출 관련 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EU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이유는 또 있다. 유럽 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 관련 세금 회피와 비용 절감을 위해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덩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있다. EU는 CBAM 도입 후 2030년부터 매년 91억 유로(약 100억 달러)의 세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모든 것은 EU가 CBAM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배경을 구성한다.

CBAM이 러시아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

EU의 CBAM 적용은 탄소 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수출에 큰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스(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와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특히, 유럽이 수입하

고 있는 제품군 중 CBAM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품군의 약 17%가 러시아산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료: Sandbag 및 E3G 보고서

영국에서 설립된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샌드백(Sandbag)과 E3G가 2021년 8월에 시행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의 CBAM 도입으로 2033년 유럽행 러시아 수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규모는 연 19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2033년은 EU의 무상 할당 탄소 배출 허용량이 ‘제로’가 되는 해로, 러시아의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현재 EU의 CBAM 우선 적용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전환 기간에 플라스틱·유기화학품으로 적용이 확대된다면 러시아는 최대 연 30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BAM 도입으로 러시아가 향후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여느 국가들보다 높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러시아의 CBAM 대응 방안

EU의 CBAM 도입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 수출품 비중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이다. 러시아는 당분간 수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탄소배출권 규제 기준을 둔 동아시아 지역 수출품 비중을 늘리는 방

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여기서 러시아의 대표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출국은 중국, 한국, 일본, 인도인데, 2021년 기준 러시아의 수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범주 내 상품군의 아·태지역 수출 비중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5%까지 차지한다.

하지만 러시아의 아·태 지역으로 수출 비중 확대는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아·태 지역 주요 수출 대상국 역시 탄소배출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를 제외한 세 국가는 이미 탄소 배출 저감 문제를 다뤘었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공식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2021년 7월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소 출범으로 약 2,000개 사가 참여하는 40억t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형성했다. 심지어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마저 2022년 8월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러시아 정부의 탈탄소화 정책 실천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 글머리에서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탄소중립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 역시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나름대로 꾸준히 펼쳐왔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0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의 탄소 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출기업에 미칠 CBAM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브랏스크, 니즈니타길, 옴스크, 치타 등 산업 유해 물질 배출량이 많은 12개 도시를 중심으로 2026년 말까지 유해 물질 배출량을 2017년 수치 대비 20%를 감축하는 ‘청

정 대기’ 연방 프로젝트도 수립했다. 2023년 올해부터는 300여 개 탄소 과다 배출 기업에 의무화된 ‘유해 물질 감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불가피한 선택이 된 러시아의 탄소중립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경제제재가 10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유럽의 CBAM 적용이 러시아 수출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문제는 러시아 경제가 CBAM의 영향권 아래 있어 이를 피해 갈 방법이 유럽과의 교역 단절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미래에 닥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교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최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도 점차 탄소배출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러시아의 탈탄소 경제로의 산업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상황이 되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서구의 대러 제재와 EU의 CBAM 도입이라는 상황의 강제가 러시아의 동아시아 시장 중시 정책을 강화해 주고 있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